



4면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전주교육지원청 방문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음 6월 29일) 제3788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부터 '큰 호응'

21일 하루동안 18만3043건 금액으로는 453억원 규모
신청 방식별로 신용·체크카드가 9만5418건으로 최대
9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 진행... 부정 사용시 환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첫날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하루 동안 18만3,043건, 금액으로는 453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전체 예산 3,577억원 중 약 12.7%에 해당하는 수치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청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9만5,418건(2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불카드는 6만4,549건(175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은 2만3,076건(55억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되며, 예를 들어 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나 7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와 제휴된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소비쿠폰은 전북 도민에게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제공하고,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속한 지급과 불편 없는 행정 처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중고 거래 등으로 부정 유통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환수,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소비쿠폰으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하거나, 거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허위로 청구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이 상품권을 불법 환전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시 지역건설산업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한 가운데, 22일 김광영 도시사와 도내 건설협회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도내 지구단위계획에 '지역업체 참여' 조건화

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 참여 비율 따라 최대 20%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시 지역건설산업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지역자재 사용과 하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불과하여 공동주택 같은 민간영역의 건설공사에서는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도내 공동주택 시장은 브랜드를 앞세운 외지 대형 건설업체 중심으로, 2024년 기준, 도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건설 중인 공동주택 30개소(4조8,259억원) 가운데, 도내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현장은 5개소(3,712억원, 7.7%)에 불과했다.

이에, 도는 지역건설산업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도·시군을 비롯해 11개의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총 5차례에 걸친 TF팀 회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침을 확정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이번 지침의 핵심은 지역건설산업의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것으로, 최대 20%까지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세부 항목은 △중합건설업((공동)도급비율 10% 이상) 5.1%, △전문건설업(하도급비율 35% 이상) 5.8%, △전기·통신·소방((하)도급 합산비율 30% 이상) 2.3%, △설계용역((공동)도

급비율 30% 이상) 1.6%, △지역자재(주요자재비율 70% 이상) 3.6%, △지역장비(건설장비비율 50% 이상) 1.6%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되며, 항목별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지침을 통해,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평균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형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본 지침은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지역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업체·자재·장비 등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내년 예산 확보 대응 전략 점검... 9월 2일 기재부·국회 설득 나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장 참석... 전략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재정 기조 변화 속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 여건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경기 부진에 대응해 적극 재정을 예고하는 한편,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사업 예산 반영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는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각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기재부 1차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미반영되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2~3차 심의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재부 반응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점검 해소를 위한 세부 전략이 실·국별로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는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22일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회 제출 마감일인 9월 2일까지를 '국가예산 확보 특별활동기간'으로 삼고, 지휘부를 중심으로 기재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 가는 설득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권과 시·군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예산 반영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예산 반영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

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기재부 제2차관, 예산실장, 각 국·과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건의 활동은 물론, 국회의원 협조 요청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기재부와 의 예산 협의는 물론, 국회 대응까지 이어지는 하반기 국가예산 확보 일정에 맞춰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올 자원순환의 날 전국 행사 개최지 '김제시'

환경부 주관...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주년 맞아 9월 5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자원순환의 날' 전국 행사의 개최지로 김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5일 김제 국민체육센터와 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으로, 전국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대규모 환경 축제로 진행된다.

도와 김제시는 지난 3월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서류심사, 발표평가, 현장조사 등 환경부의 절차를 거쳐 지난 21일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이만호 기자 · 김제=곽노태 기자

이제 임실 2025 임실방문의해 Visit Imsil year

임실N치즈축제

옥정호 붕어섬 출렁다리

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아쿠아페스티벌

